

기아차 직원 차 구입 '세금 특혜' 제동 걸리나

광주시 "할인가 기준 취득세 부과는 조세정의 어긋난다" 서구청, 5년간 매매내역 요구... 기아차 "왜 광주만" 거부

광주시 서구청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법인에 최근 5년간 법인과 임직원 간 신차 매매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소속 임직원의 차량 구입시 매겨지는 취득세(지방세)가 시중 판매가가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할인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조세 정의와 배치되는 일종의 '세금 특혜'라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자료 검토 후 취득세 부과 기준을 바로잡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5년간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 차액을 추징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기아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28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는 광주시

의 요청을 받고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기아차 광주공장 측에 최근 5년간 법인과 임직원 간 차량 매매 내역과 임직원에 대한 차량 할인 혜택을 규정한 노사 협약 제출을 요구했다.

차량 구입 및 세금 혜택을 노리고서 차량 구입 후 노사 합의에 따른 의무보유기간(2년)을 채우지 않고 제 3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청의 이 같은 요구는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차량 구입시 3~30%의 할인 혜택이 있는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7%) 부과 시중 판매가가 아닌 할인가 적용을 받는 것이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앞서 광주시는 기아차 광주공장 측이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자 관할 구청인 서구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아차 광주공장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고, 경기도나 울산 등지에서도 그간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여전히 구체적 자료 제공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그러나 기아차 광주공장이 최근 5년간 임직원에 판매한 차량이 1만 2500대에 이르고, 할인을 평균 25%에 달한다는 점에서 지방세수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자료 확보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취득세 부과 기준을 임직원 할인가가 아닌 시중 판매가로 바로잡을 경우 임직원들을 상대로 추정 가능한 5년치 취득세 차액에만 해도 수백억원, 매년 수십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과거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유권해석 결과도 광주시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1년 광주시에 내려보낸 유권해석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자동차 회사 법인과 임직원과의 거래에서 5% 이상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아차 임직원 신차 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 기준이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아차 측은 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 경기도, 울산 등 타 시도에서는 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번 결과를 따라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중·장년 잇단 '데이트 폭력' 왜?

광주·전남 올해 70건... 불륜 커플 증가 원인

중·장년(40~50대)들의 '데이트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5명 중 1명은 본인 가정이 있거나 남편이 있는 여성과 불륜을 이어오다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는 모두 194건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 9명, 20대 54명, 30대 58명, 40대 49명, 50대 21명, 60대 이 상 5명 등으로 40~50대 중·장년층의 데이트 폭력이 70건(36%)에 달했다.

전체 신고 중 피의자나 피해자가 기혼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사례는 모두 33건으로 나타났다. 10~20대의 혼인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40~50대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달 중순 여수에서는 서로가 정이 있음에도 13년째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6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피의자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재물손괴 혐의로 여수경찰에 불구속 입

건된 A(61)씨는 내연 여성 B(46)씨의 이별통보를 참지 못하고 B씨 차량 타이어를 찢어버렸다.

최근 나주경찰이 상습상해 등 혐의로 구속·송치한 C(56)씨도 3년 동안 불륜 관계에 있던 D(여·56)씨의 이별 통보가 발행 동기였다. C씨는 D씨의 눈 주위를 찢러 상해를 입히는 등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했다. C씨의 폭행과 협박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C씨는 자신의 자해 사진과 함께 "불을 지르고 죽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D씨에게 보내는 등 3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협박했다.

경찰은 올 초부터 '데이트 폭력'을 단순 폭력이 아닌 가정폭력에 준해 수사·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이들의 신고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건을 상담하거나 수사할 때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교직원 채용 비리 혐의 조선대 전 이사 검거

채용시기 등 5건의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박성섭(68) 전 조선대 이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광산경찰은 조선대 전 이사인 박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조선대 설립자이자 지난 1988년 물러난 박철용 전 총장의 차남이다. 박씨는 지난해 조선이공대 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박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조대 이공대 총장 등을 통해 교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광산경찰서에 접수된 피해만 해도 금액이 2억원에 달하며 동부경찰서와 검찰 등에도 고발장이 접수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외에도 상해와 폭행 건도 별건으로 고소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행방을 감춰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김형호기자 khh@



출근길 숙취음주 단속 28일 오전 7시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숙취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광주 5개 경찰서가 진행한 단속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 28명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경찰은 근절시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영표 광주시의원 구속

알선수재 등 혐의

사립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진웅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고교등장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남구 모 사립학교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6억2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정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또 남구청과 남구보건소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겠다고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공사 발주를 내려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나주서 돼지 축사 불

1억4500만원 피해

28일 오전 0시35분께 나주시 다도면의 한 돼지축사에서 불이 나 1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돼지 683마리가 죽고 축사 2동 999㎡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4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검찰,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재청구

검찰이 수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구속 여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양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출소 한달만에 또... 차량 파손 '동네 주폭' 구속될 처지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주변에 폭력을 행사하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남의 차량에 손을 댔다가 구속될 처지.

○"2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 모(48)씨는 전날 새벽 1시께 광주시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세워둔 임모(32)씨의 SM3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돌로 내리치고 차량 위로 올라가 보닛과 지붕

을 마구 밟아 2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폭력, 재물손괴 등 전과 36명으로 드러난 이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 달 출소했다가 이날 술을 마시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에서 그는 "술을 마신 이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평택 토지 매매

★ 삼성전자 120만평 ★ LG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평택 신장동 (개발토지)
초역세권 송탄역 5분 (송북시장) / 토지 184평
오피스텔 65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15억 발생
▶ 매가 12억

경기도 화성 A.P.T 분양전환

화순 시청 2분 !! 초 역세권 시청역 여의도까지 30분! 남양뉴타운 개발도시

① 매가 2억 3천 ② 대출 2억 ③ 임대 보 3천 / 월 70만

실 투자 1천만 (천만원에 집한채 마련) (1억에 10채)

지역 → 경기도, 서울권, 순천 전남권

오피스텔 및 사무실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6층 - 45평
▶ 최고급 인테리어 (약 6평 지은 짙짙방 1개)
(시설비 약 4천만) (사무실 2개)
▶ 천변로 전망 최고 !! 주차 완비 (사무실 최적함)

★ 매가 1억 4천만 ★

평택 고덕신도시 토지 (소액 투자)

① 평택시 고덕면 방촌리 (고덕 교차로 7분) / 120평 (평당 200만)
▶ 매가 2억 4천만

②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옆) / 922평 (평당 30만)
▶ 매가 1억 4천 760만

③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5분) /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 8천 235만

(전남,순천) 20평형 A.P.T 분양

▶ 시세 → 1억 5백만 ▶ 매가 → 9천만 (웅8천만)
▶ 실투자 1천만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매매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서구 쌍촌동 고급형 원룸 매매 (운천저수지 3분, 운천역 3분)
▶ 6층 - 23평 ▶ 투룸 형, 코너자리, 리모델링완비, 풀옵션	▶ 2층 - 10평 ▶ 리모델링완비, 풀옵션
보 500만, 월 45만	보 200만, 월 30만
▶ 매가 8천 500만	▶ 매가 4천만

010-6670-9800

010-7384-7800

062-382-5500 010-6834-4800